

성남시 시민사회 활성화 포럼

결과보고

2019. 12.



목 차

I. 개요	1
1. 진행개요	3
2. 프로그램	3
3. 포럼 사진	4
II. 자료 및 포럼 내용	5
1. [발제1]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6
2. [발제2]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30
3. [토론1] 공정옥 대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총괄실장	43
4. [토론2] 김현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TF위원	48
5. [토론3] 박재윤 호모인테르 대표	53
6. [토론4] 이준호 성남KYC 공동대표	55
7. [토론5] 심우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	57
8.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58

I. 개요

1. 진행개요
2. 프로그램
3. 포럼 사진

1 진행개요

- 1) 일 시 : 2019년 12월 13일 (금) 오후 5시-7시
- 2) 장 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
- 3) 대 상 :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심있는 성남시민 100여 명
- 4) 주 제 : 성남시 시민참여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 방향 모색
- 5) 참여자
 - ① 좌장: 윤석인 前성남시 옴부즈만
 - ② 발제: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장 등 2인
 - ③ 토론: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TF위원, 비영리스타트업 호모인테르, 성남KYC,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인

2 프로그램

시 간	내용
-5:00	등록
5:00-5:05 (5')	인사말씀 및 프로그램 소개
발제	
5:05-5:45 (40')	[발제1]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시민참여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혁신
	[발제2]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장 공익활동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NGO/NPO지원을 중심으로
지정토론	
5:45-6:25 (40')	[좌 장] 윤석인 前성남시 옴부즈만
	[토론1] 공정옥 대구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총괄실장
	[토론2] 김 현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TF 위원
	[토론3] 박재윤 호모인테르 대표
	[토론4] 이준호 성남KYC 공동대표
	[토론5] 심우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자유토론	
6:25-6:55 (30')	질의응답, 의견수렴
6:55-7:00 (5')	폐회

3 포럼 사진



II. 자료 및 포럼 내용

1. [발제1]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2. [발제2]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3. [토론1] 공정옥 대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총괄실장
4. [토론2] 김현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TF위원
5. [토론3] 박재윤 호모인테르 대표
6. [토론4] 이준호 성남KYC 공동대표
7. [토론5] 심우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
8. 자유토론

1 [발제1]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1) 발제자료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혁신

중간지원 전략을 중심으로



★ 복잡한 세상의 주인으로 서는 張三李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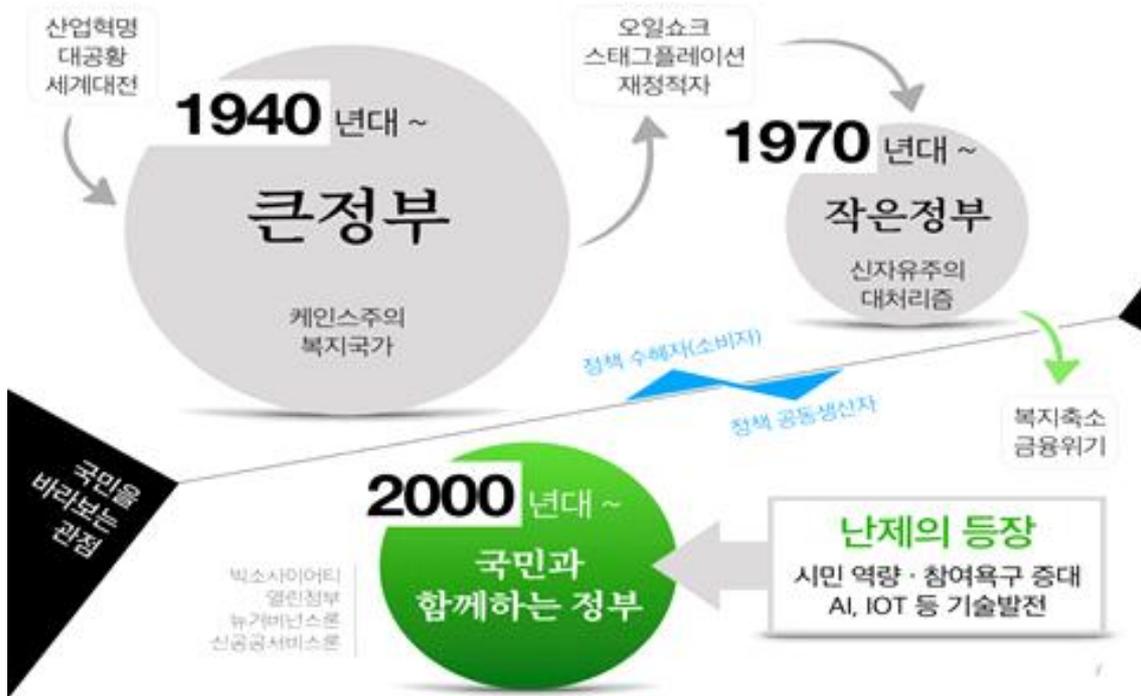


활사년



복잡해지는 사회, 엘리트시대의 종언과 대중참여의 시대
국민-이해당사자와의 소통과 참여 없는 문제 해결 불가능 시대

* 시민참여가 중요해지는 시대 변화



* 정부 패러다임의 전환

기준	관료제정부	기업가적 정부	주민참여적 정부
정부역할	행위자 역할	방향잡기 역할	제도적 용기제공
정부활동	직접 서비스	혁신과 기업과 활동	조정과 촉진자
서비스공급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	서비스제공에 경쟁도	시민과 공동으로 공급
관리방식	규칙중심관리	임무중심관리	주민중심관리
예산제도	투입중심예산	성과연계 예산	주민참여예산
행정가치	관료중심 지출지향 사후치료	고객중심 수익창출 예측과 예방	시민중심 공적가치-집합적소비 참여와 협의
행정주체	집권적 계층제	정부(기업가)와 고객	정부와 시민
행정방식	명령과 통제	고객과 네트워크형성	주인과 네트워크형성
주요운영기제	행정 메카니즘	시장 메카니즘	숙의와 시민역량
좋은정부평가	규칙과 책임성	효율성, 책임성	주민자치역량

자료출처: 조경호·박재홍(2006: 19)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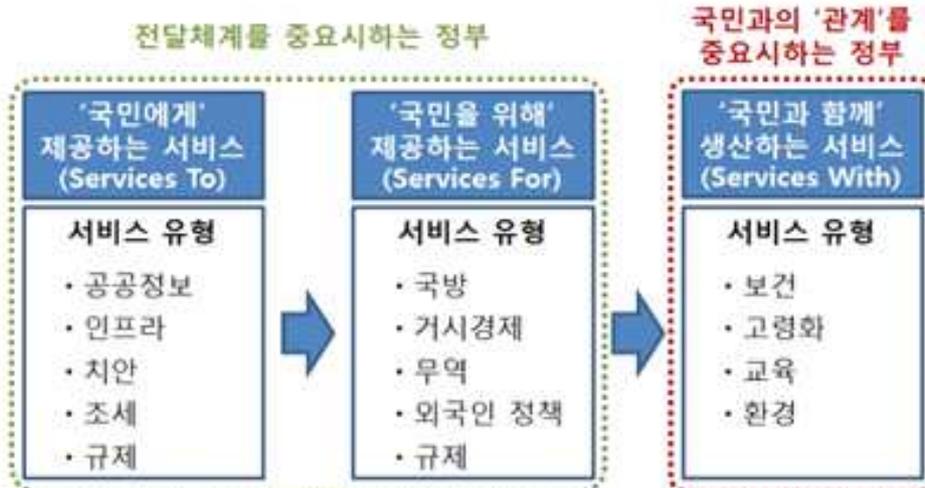
★ 문재인정부의 시대 규정: 국민의 시대

구 분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국민의 성격	근대적 국민	주권자 국민
국민-국가 관계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
국민주권의 특성	대표되는 국민주권	개개인의 국민주권
권력의 성격	위임된 권력	생성적 권력
참여방식	제도화된 국민참여	일상적인 국민주권 행사
주권 실현방식	참정권, 투표권	국민제안, 국민숙의, 국민결정
역사적 사건	1987년 6월항쟁	2016년 촛불집회
사건의 의미	국민주권의 통로-제도 구축	아래로부터의 국민주권 표출
민주주의 형태	제도 민주주의	일상 민주주의
정치-시민 관계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연계
시민참여 기반	조직화된 시민사회 기반	자발적 개인들의 네트워크

□ 주권자 민주주의 구성요소

- 주권자 민주주의 구성요소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과정의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 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
- ② 직접 민주주의 → 내가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정책
- ③ 일상의 민주주의 →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
- ④ 과정의 민주주의 →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 ⑤ 풀뿌리 민주주의 → 자치분권과 생활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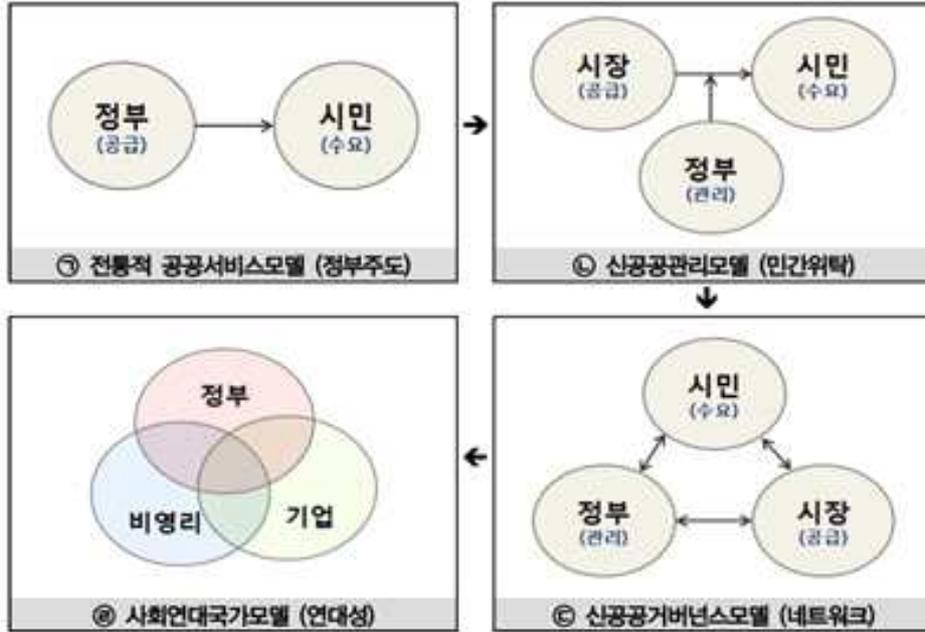
★ 전달형과 관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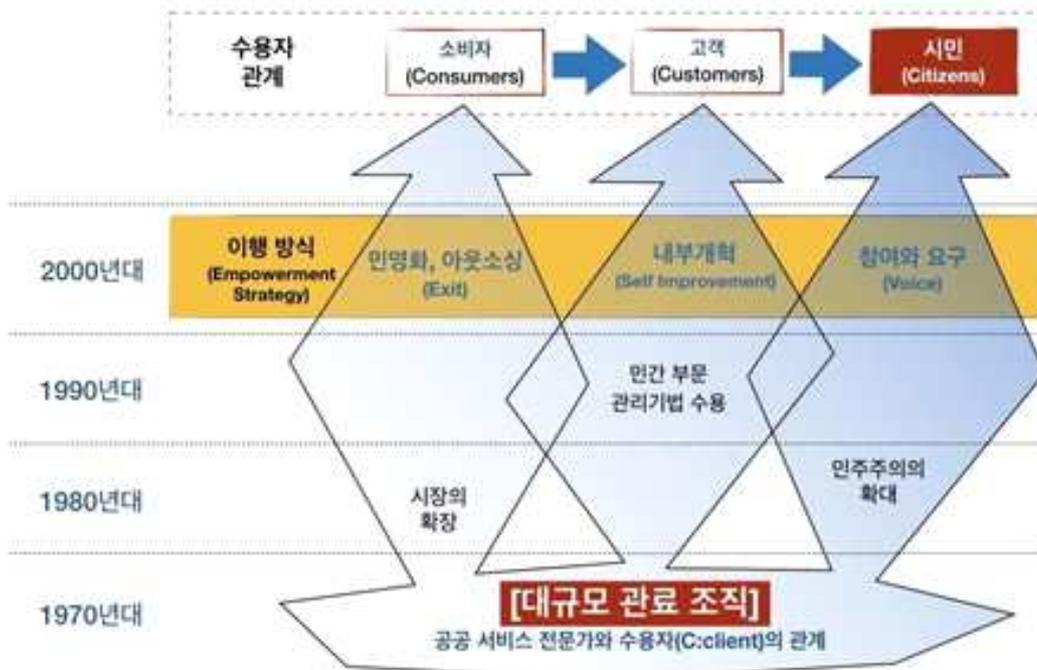
자료 : Mulgan(2012).

* 공공서비스모델 변화

<그림 3-14> 정부역할 중심의 공공서비스모델 변천



* 정부혁신 패러다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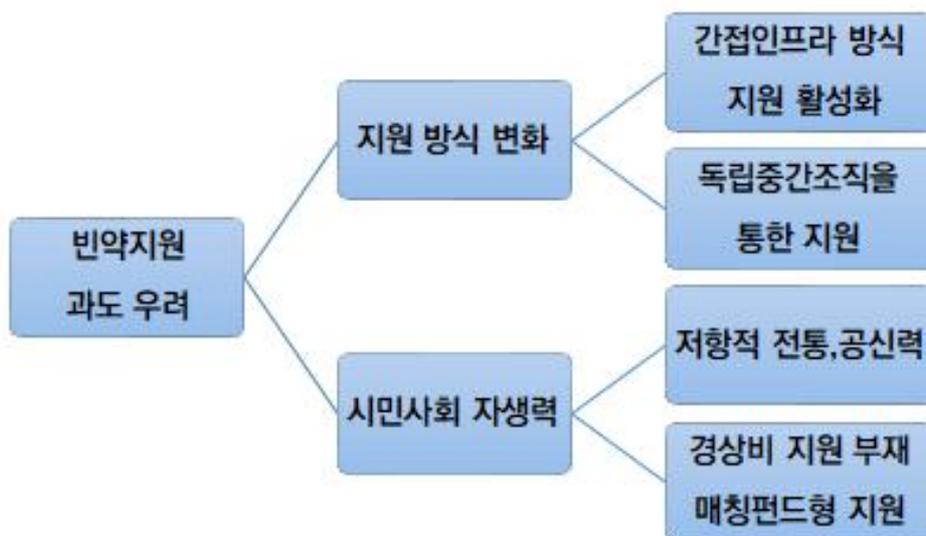


* 시민사회단체의 자금자족 신화

Types of NPOs	Government	Private Giving (individual giving, foundation, corporate)	Fees & charges
	Average %	Average %	Average %
Health	56.42	10.58	33.04
Education and Research	47.17	7.75	45.04
Social Service	47.08	16.83	36.00
Civic and Advocacy	39.04	21.13	39.92
(한국 NGO)	23.8	6.8	69.4
International Activities	37.73	36.09	26.14
Development and Housing	34.39	11.09	54.61
Environment	32.48	23.87	43.65
Culture and Recreation	21.46	13.13	65.17
Religious and Workshop	17.56	55.17	27.22
Philanthropy	15.95	35.73	48.36
Professional and Union	6.42	5.13	88.46
Others	6.40	24.20	69.20

자료출처: Wang(2006: 21)라; 박관규(2012: 107)

* 시민사회 자원의 부정적 효과의 진실



★ 시민사회 실패(내부)

내부적 실패 (Internal Failure)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 (Implications for civil society)
제한된 관심 (restricted foc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규모의 사회적문제와 결과에 대해 무지 · 초기 멤버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거의 불가능 · 다른 NGO와 중복되거나 경쟁 ·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확장하는데 한계
아마추어리즘 (amateur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수준의 인적 자원 · 한정된 조직자원 · 비효율적인 조직과 비효율적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자원부족 (material Scar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에 근거한 자원봉사자 확보가능 그러나 자원부족 · 좋은 프로그램을 확장하는데 한계 · 소수의 재정지원자에게 의존하는 경우 독립성 침해 · 현저한 자원부족
섹터적인 파편화 (Sector Fragm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디네이션에 대한 실패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자원 낭비 · NGO 내부의 경쟁이 정부와 재정지원자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 · NGO들 간의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지 못함 · 집단적 공동행동 실패
편협주의 (sector Parochial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GO 내부의 소통부재 · 공동이익 성취 불가 · 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확장시키는 것이 불가능

★ 시민사회 실패(외부)

외부적 실패 (External Failure)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 (Implications for civil society)
정당성과 책임성 (Legitimacy&Account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등)공격 받았을 경우에 시민의 지지가 쉽게 와해 · 법적 보호막이 없고 · 엘리트주의로 비난 받을 경우에 취약함 · 일반 공중이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이해당사자들에게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음
정부와의 관계 (relation with st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NGO를 경쟁자로 보는 경우 · 정부의 신호도에 시민사회가 맞춰주는 경우 · 정치적 공간의 축소
시장관계 (Market re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거리를 두는 경우 · 비즈니스 신호도에 시민사회가 맞춰주기 · 지원자원의 축소, 비즈니스 주도 NGO가 자원을 잠식
국제관계 (International contex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가치와 신호도에 어떻게 국제적 자원을 링크할 것인가 · 분명한 지역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것

* 시민사회 실패를 보완하는 중간지원기관

지원기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가치에 기초한 시민사회 조직으로서 시민사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훈련 및 교육', '연구와 정보 확보', '환경, 여성, 소수자, 아동, 인권, 지역 거버넌스와 같은 가치들에 대한 주창(advocacy)', '네트워킹' 등의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IDR Report 1999:9).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다원적 사회에 있어 공생과 협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역사회와 NPO의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며, 인재·자금·정보 등의 제공자로서, 또한 NPO 간의 중계 또는 광의의 의미에서는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코디네이터 하는 조직"(일본 내각부)

연대와 네트워크 지원

인적자원지원

재정지원

연구와 정보수집 지원

시장과 정부와 교량적 연결 지원

* 지원기관과 시민사회의 실패

지원기관유형	시민사회실패	어떻게 시민사회실패가 해결되는가?
연대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편화 · 제한된 관심 · 정부관계의 한계 · 국제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를 공유하고 합의하기 위한 포럼, 세미나 조직 · 공동행동을 위한 코디네이터로서 기능 · 특정 섹터운동을 외부자로서 대표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추어리즘 · 편협주의 · 파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인 능력과 조직적 능력 배가 · 폭넓은 시야와 관점 · 이슈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추구
재정지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 자원의 한계 · 제한된 관심 · 아마추어리즘 · 편협주의 · 기부자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모금과 분배 · 지원기관을 코디네이터하고 네트워크링하는 작업 · 기금모금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 섹터 간의 매개자로서 기능
연구와 정보수집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된 관심 · 파편화 · 편협성 · 국가, 기업, 국제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GO 역할에 대한 확장된 관점 · 운동관점을 세우는 역할 · 정보의 공유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를 코디네이터 · 섹터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 · 다른 섹터 NGO에 대한 역할에 대한 관점을 획득
교량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협성 · 제한된 관심 · 국가, 기업, 국제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섹터적 관심과 이익을 전달 ·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이해를 증진 · 국가, 기업, 국제기구와의 교량역할 담당

자료출처: IDR Report(1999: 14) 재구성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구분	내용
교육, 훈련	리더십개발, 기금관리, 개발, 조직성장
기술적 지원	중장기 기획, 재무관리, 상근자 역량강화
기금의 재분배	시상제도, 공모지원
조직진단, 평가	조직의 자산, 수요 분석과 측정,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진단, 컨설팅
지식공유	필요와 관심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연구, 조사
네트워킹	- 지역의 이슈와 문제 공유, 협력적인 기회가능성 발굴

* 초기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센터	설립유형	핵심기능	운영현황	공여단체	설립연도
광주 NGO 센터	·(사)광주NGO시민 재단 ·크레디트협동 ·민중참여포럼	·시민활동공간제공 ·활동가 및 시민리더육성 ·지역공동체 network & governance ·사회적 경제공동체 지원 ·기부문화확산 ·research & information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공간규모 1,163㎡(370명) ·상근직원 3명 ·운영비 1억2천 ·사업비5억7천만 (국비3억, 시비2억7천)	·보수단체 9개 ·진보단체 36개	2009
부산 NGO 센터	·(사)부산시민재단 민주도향 ·크레디트협동 ·민중참여포럼	·시민사회운동경보센터 ·공부리주민운동 활성화지원(마을만들기) ·NGO활성화 지원중심(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중참여사업(지역사회주요의제협 력, 갈등관리포럼) ·주민조직역량강화지원 ·대안과모색(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공간규모 330㎡ ·상근직원 3명 ·운영비 1억2천(민간경 상보조) ·사업비7억(국비 3억, 시비4억)	·12개단 체중심	2009
대구 NGO 센터	·시민주도형 HO ·민중자	·시민사회활동 지원 ·주민운동역량개발 및 공부리주민조직 보육지원 ·경제대안 개발 및 연구 ·기부문화 활성화 ·공익활동공간제공 ·기금조성및 배분	·공간규모 330㎡ ·상근직원 3명 ·운영비 ·사업비1억7천(경부지원임)	·시민사회 단체연대 회의 중앙	2009

* 초기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대전 풀뿌리 시민 센터	·(사)풀뿌리 사람들 ·민주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주민조직 인제육성사업 ·사회적 기업지원사업 ·자발적 주민운동 교육 및 지원 ·공익사업기금조성 ·주민조직 네트워크링 ·풀뿌리단체 공간지원 ·공모현상형	·공간규모 467㎡ ·상근직원 3명 ·운영비 1억원 ·사업비: 정부지원자금 ·공모사업경실	·독립단체 (사)풀뿌 리사람들	2008
강원 NGO 센터	·(사)강원NGO재단 ·인관형각 모델	·시민사회의 성장 ·NGO운영능력향상 ·사회통합적지역발전전략 ·대안경제성장 ·인재양육 및 육성 ·대역사회개발 ·활동가지원기금조성 및 ·활동기금조성	·공간규모 400㎡ ·상근직원 3명 ·운영비7천8백만 (민관경상프로젝) ·사업비4억5천(공비3억,자부담1억5천만)	·시민사회 단체연대 회의소속 42개단 체중심	2009
충북 NGO 센터	·(사)충북시민재단 ·조례안 ·민주도	·시민사회정보센터 ·지역별 NGO활성발전 ·풀뿌리주민운동지원과 육성 ·시민교육활동지원 ·인관형치 ·인적자원 관리및지원 ·대안경제실현과 확산 ·시민사회공동사업 ·상설지원기능 ·공간지원기능	·공간규모 1140㎡(345평) ·상근직원 3명 ·운영비1억2천 (충북도위탁사 업, 3년) ·사업비11억(공 비5억,자 부담5억, 정부출1억)	·시민단체 연대회의 중심(70 개단체) ·운영조례 안 근거	2012

*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방식

구분	직영(전담조직)	민간위탁
장점	고용의 안정성 정부 내 원활한 소통 시설 등에 대한 신속 대응	전문성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원 활한 공공서비스 제공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 성과관리 가능 시민중심 거버넌스 구축 업무 및 책임 구분 분명
단점	공무원순환근무로 업무 연계성과 전문성 미흡 행정 및 예산 효율성 미흡 적정운영 및 성과 관리 어려움	낮은 근무환경 및 처우 행정 및 예산 처리절차 복잡 시설 등에 신속 대응 어려움

*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방안

구분	통합	분리 운영
장점	예산절감 정책의 중복집행 해소 홍보 마케팅 투입 절감 네트워크 공유 거버넌스 폭의 확장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집행 집중 기관의 달성 목표와 대상의 차이점 발생 최소화
단점	예산 집행의 이중 구조 행정 처리 이중 구조	유사한 지원제도 공모 사업, 교육 사업 등의 중복 협력의 강화보다 행정 체계에 의한 분절 지역사회내 연계 활동 필요

* 서울시의 중간지원조직운영 혁신



[그림 1]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안

* 민간협약-협치형 위탁으로 진화



*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관점

1. 시민의 문제해결 역량의 강화에 기여
2. 좋은 시민사회를 통해 좋은 정부와 시장의 창출을 지향
3.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 주체의 활용과 참여 추진
4.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효능감 강화

*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전략

1. 시민주권 패러다임의 정립: 종합적 차원
2. 시민주권 인지적 행정: 여러 부서의 협업, 현장 수요 중심 접근
3. 지역공동체 기반: 장기적 공동체 능력 향상
4. 지역특성 맞춤
5. 수요 대응 지원 정책
6. 사회적 배제 계층 직접 참여 지원
7.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
8. 민간투자 촉진
9. 연구개발 지원
10. 중간지원조직 지원

* 중간지원조직의 변화 방향

조직에서 플랫폼으로,
플랫폼을 매개로 네트워크된 개인들
과정이 다르면 결과물도 다르다.

★ 중간지원조직의 혁신

중간조직의 전달형에서 관계형으로 전환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지향

중간조직의 역량강화, 전문성 지원 및 특성화

액션러닝 방식의 역량 강화와 피어컨설팅 활성화(Project by Doing)

당사자간 협업 지원형 중간지원 플랫폼 구축

★ 문제분류방식의 변화



문제를 모으는 과정이 곧 해결의 과정이다

태그형 이미 고정화된 분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범위를 개별적으로 태그로 만들고 같은 태그들끼리 연결함으로써 문제를 공유하고 공동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

출처: 하승장, 문제인경부이경부혁신정책연구회

★ 자산 중심 관점

이전	새로운 관점
결핍, 결손, 부족한 것에 대한 관심	유용한 자질, 자산에 관심
해답을 주는 문제	동일시, 일체화의 기회
자선에 대한 훈련과 지도	투자에 대한 훈련 및 지도
더 많은 서비스 혜택	참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정부기관에 대한 강조	기업, 종교단체, 협회, 기관등에 대한 역할 기대 강화
개인에 초점	지역사회, 이웃에 대한 강조
유지	변화, 발전
주민을 '고객(Clients)'으로 보기	주민들을 '시민(CITIZEN)'으로 보기
'고정된' 사람들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 변화발전과정에 있는 사람들
프로그램의 진행	사람(의 긍정적 변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법-사회혁신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법-정부혁신



★ 사회적 난제에 포위된 한국사회



출전: 사회혁신공간테이아웃연구원, 한국사회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2017)

* 사회혁신의 핵심 특징

사회문제 해결 → 시민참여, 발상의 전환, 기술활용, 실험과 도전
 → 사회의 역량 강화 → 국민 삶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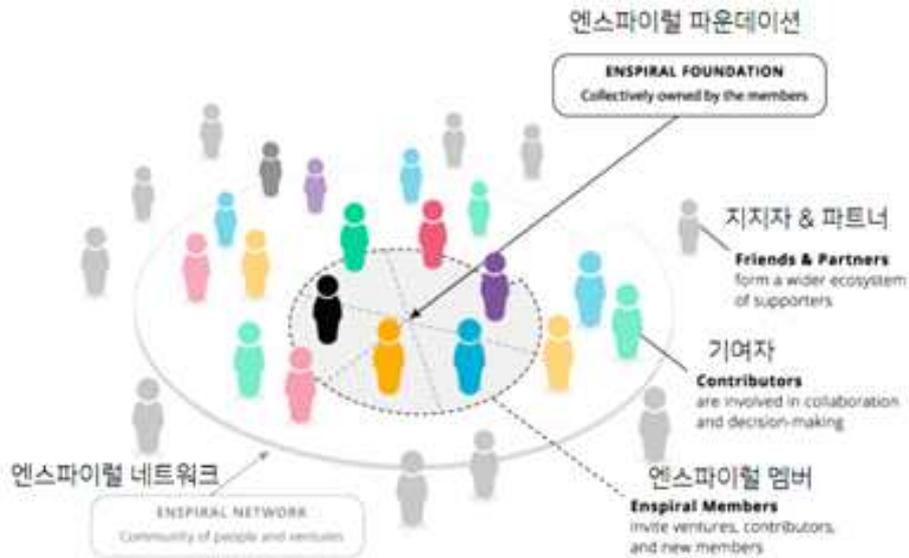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의 이해

* 영국 협동조합자치구 - 램베스구



출처: 전성환, 램베스사재구 본 민관합치모임

* 램베스구 혁신사례-엔스파이럴



출전: 장석권, 엔스파이럴의 이해

* 램베스구 혁신사례-엔스파이럴



DIY 소셜벤처 지원 네트워크
 자발적 사회적창업, 사회적경제 지원의 역할 정해지지 않은 유연한 조직

출전: 장석권, 엔스파이럴의 이해

희망제작소는

우리사회의 크고 작은 의제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독립 민간연구소입니다.

시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Tank

THE HOPE INSTITUTE



Let's Build Hope Together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2) 속기록



▲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NGO 또는 시민단체가 시민사회와 같은 말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민의 공익활동지원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이해하실 것이다. 왜 공익활동을 공공이 지원해야 하는가?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의 자발적 결사체를 왜 공공이 왜 지원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이론이 있다. 먼저 정부의 실패, 기업의 실패, 시장의 실패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 그림은 국가 사회주의의 실패, 월스트리트 점령 캠페인처럼 시장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연결망이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큰 정부, 작은 정부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정부가 관료 중심으로 운영되던 ‘관료제 정부’에서, ‘기업가적 정부’, 나아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적 정부’로 변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할 때 시대규정을 ‘국민의 시대’로 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민은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 원천적 국민으로 본다. 그것도 집단으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개개인이 생활 터전에서 결정, 집행, 평가까지 하는 국민 권력 시대를 만들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민에게, 그리고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만족도를 높

이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을 대상화한 측면이 있다. 지금은 국민과 함께 생산하는, 시민사회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시대로, 그래서 관계를 중시하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시민, 정부, 시장의 상호관계는 점차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운영과 관련해서도 과거 소비자, 그리고 고객으로 대했던 것로부터 인제는 시민이 공동생산자, 주권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시민사회 또는 시민단체를 왜 지원하느냐.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독립성이 저해될 것이고, 시민단체는 시민끼리 자급자족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제가 이를 '시민사회단체의 자급자족 신화'로 표현했다.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비율이 훨씬 낮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 69.4%가 회비로 충당되는데 비교하면, 다른 나라는 선진국일수록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낮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이야기하고 싶다.

시민사회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에 염려가 많다. 그런데 기업의 기술개발에는 조단위 지원을 하면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빈약한 지원에 대비 우려가 너무 큰 것이 현실이다. 독립성 면에서 문제가 된다면 직접지원 대신 간접지원 또는 간접 인프라를 키워주고, 독립적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재정지원이나 기타 자원연계 등 독립성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만들어져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자생력에 대한 우려도 짚고 넘어가고 싶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독립성과 저항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공익활동 보조금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조금은 경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보조금을 받을수록 경직성 경비, 인건비 등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칭하거나, 또는 시민단체가 자부담하는 경우를 우선 선정해주는 기준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자생력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별도의 지원조직을 만들고 협력해야 할 필요성 중 하나는 시민사회도 실패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 이론에서 시민단체는 깨어있는 시민의 결사체로 연결되어 활동하지만,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각각의 주체는 제한된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전체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으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자원의 부족으로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부분적인 파편화되어 시민단체 내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편협

주의로 인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시민사회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면 공공이 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사회 외부적으로는 정당성과 책임성, 대표성 논란을 포함하여, 정부와의 관계, 시장과의 관계, 국제관계에 있어 역할이 미흡할 수 있다. 대개 자치정부에서 시민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이 외부적 관계는 큰 부분은 아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다.

이런 시민사회 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이 연대와 네트워크 지원, 인적자원 개발로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다. 그리고 재정지원 사업, 연구와 정보수집 지원, 시장과 정부를 중개하는 역할도 해볼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따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사회 실패 중에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는지 자료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민사회가 가진 물적 자원의 한계, 제한된 관심, 아마추어리즘, 편협주의, 기부자와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간지원조직은 특정 역할만 수행하기도, 종합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순수 민간에서 운영하는 아름다운 재단은 다른 역할도 하지만 재정지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특수공익법인으로 운영하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재정지원 뿐 아니라,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순수 공익활동과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은 참여정부 시절,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투자로 몇 군데 설립되었다. 대표적으로 광주NGO센터, 부산NGO센터, 대구NGO센터, 대전풀뿌리시민센터, 강원NGO센터, 충북NGO센터가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이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부분적으로는 역량개발사업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초기에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은 재정지원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후에 만들어진 서울시는 공익활동을 하는 활동가와 단체에 재정지원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마다 여러 고민이 있다. 먼저 직영(전담조직)의 장점은 별정직공무원 채용으로 고용의 안정성과 정부 내 원활한 소통, 시설개보수 등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단점은 공무원을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전문성이 미흡할 수 있고, 실제 재정집행의 경직성, 성과관리 등이 어려울 수 있다. 민간위탁의 장점은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행정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최소 인력 운영이 가능하고, 직접적 성과관리,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 대비 낮은 처우, 행정 및 예산처리 절차의 복잡함 등 단점이 있다.

성남시도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다.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느냐, 분리해서 병렬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지방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다.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예산 절감과 정책의 중복집행을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시민이 사회적경제조직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민단체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중복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을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홍보마케팅 비용 절감, 단위별 네트워크의 공유, 참여의 폭이 넓어지면서 거버넌스의 폭도 확장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있다.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은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마을활동을 모두 묶어서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하지만 예산이 시에서 재단으로, 다시 센터로 온다는 점에서 회계처리가 복잡할 수 있다. 분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관 특성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사한 지원제도를 가지고 공모사업이 별도로 운영되거나, 교육사업 등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 전체가 협력하기보다, 독립적인 전달체계이기 때문에 상호 연계가 부족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서울연구원에 의뢰해서 대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행정과 위탁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탁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재정지원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받아서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원의 혼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중간지원조직 내부 운영체계 개선,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구조를 만들어 가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러한 혁신형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타지방정부에서는 아직 잘 되고 있지는 않다. 정부혁신의 역점 추진과제로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으나 법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논의를 더 해나가고 있다.

오늘 성남시민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에서 민관협약으로 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민간위탁을 한다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표준협약서 자체가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되어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일방적 계약, 그리고 결과적으로 갑을관계가 되지 않도록 민간협약을 통해 과업의 협의와 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표현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시민사회가 공익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관점에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시민의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좋은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좋은 자치정부를 만들고, 성남시민 전체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로는 시의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 주체가 활용되어야 한다. 성남지역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공익활동 기금 등이 시민단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고 연결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가 해결되어 간다는 효능감을 주어야 한다.

전략적으로 성남시는 ▲시민주권 패러다임의 정립, ▲시민주권 인지적 행정(부서 협업, 현장수요 중심 접근), ▲지역공동체 기반(장기적 공동체 능력 향상), ▲지역 특성 맞춤, ▲수요 대응 지원 정책, ▲사회적 배제 계층 직접 참여 지원,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 ▲민간투자 촉진, ▲연구개발 지원, ▲중간지원조직 지원 등 10가지 정도의 요소를 고려하고, 준비해주실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조직으로 엮어가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100만 성남시민이 다 함께 연결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으로 일하는 과정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문제와 결핍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시민을 문제해결의 협력자, 조력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창출하는 가치인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회혁신’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정부혁신’으로, 지역사회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지역혁신’이라 부를 수 있다. 시민이 처한 문제를 시민의 주도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점에서 시민의 공익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협동조합 자치구로 널리 알려진 영국 램베스구는 주민이 문제를 선택하고, 해결 대안을 탐색하고, 결론을 내려서 실제 집행도 담당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초기에는 공적자금을 받아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였으나, 나중에는 당사자 간의 연대를 통해 지역재단으로 성장하는 엔스파이럴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성남시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시민사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성남시의 주인이 되고, 실제적인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가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길이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2

[발제2]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1) 발제자료

공익활동지원 , 어떻게 할 것인가 ?

NGO/NPO 지원을 중심으로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시민사회 관련 동향 및 현황

“활성화된 시민사회란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이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사회적 지지 등이 단연한 사회”

1. 시민사회 활성화가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공감대 확산

시민사회 활성화의 주요 방안으로 '조직화된 시민', '비영리단체'의 역할 강조

개인의 약한 연결로는 '근본적인' 사회 변화 어려워 강한 연결의 중심자로서의 단체 역할 중요

시민의 결사체가 다양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지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중요한 평가기준

2. 정부와 서울시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추진

2019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 정부운영,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 공공서비스를 국민과 함께 생산하고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참여확대

서울시정 4개년 계획

- 사회적 가치와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성장지원의 필요성 강조
-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서울'을 위한 시민 참여 5개 과제 발표

3. 서울시 비영리단체 활동환경 및 과제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의 절반 이상이 처한 환경 (2018,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연구, 서울시NPO지원센터 등)



양질의 비영리 일자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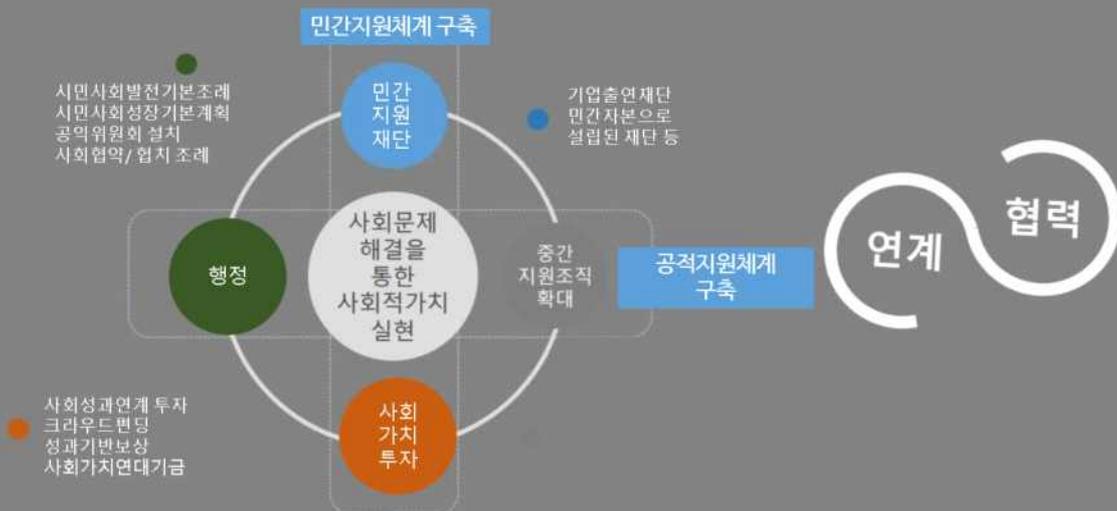
시민의 기부 및 후원 활성화

입주 / 협업공간 지원

지원의 방향



시민사회성장지원생태계 구축



시민 사단법인 전국 NPO 및 활동가 지원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익법인법, 기부금품법 등의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법안 제·개정 활동

공익모금 플랫폼 같이가치 운영

총 561개 프로젝트, 13억 4천 7백만원 지원

서울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

- 한겨레 서울8과 (사)시민의 연중 기획
- 상임위원(10개)로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가 소통하는 자리

NPO연계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 재단법인 청년재단 협력사업
- 청년150명을 NPO와 연계
- 청년활동가들에게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의 활성화 도모

비전

강한 시민사회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

미션

다양한 공익활동의 연결과 촉진을 통해 시민사회 성장에 기여



(사)시민 이사 및 운영위원회

이사회

임현진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공석기(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경민(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진승(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장),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

위정희(송파여성문화회관 관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이강준((사)시민 운영위원장), 이재석(노동공원시민모임 대표), 이정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 대표이사), 정란아(서울시NPO지원센터장), 전상직 ((사)한국자치학회 회장),

전현숙(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총장)

총 14명 운영위원회

이강준 운영위원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난희(스위치온 대표), 김소연(경희대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김소영(성대골

에너지전환마을 대표),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산권희정((사)시민 사무처장), 윤전우(서울시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이보라(권미학의원 보좌관),

이수현(생명의숲연구소 부소장), 이재현(NPO스쿨 대표), 정진임(정보공개센터 소장), 조철민(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천희(자원봉사 이음 사무처장),

최수미(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장) _ 총 16명

1. 비전과 미션

비전

공익활동에 대한 지지와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의 견고한 관계력에 기반하여,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원한다.

핵심가치

- ☐ 조직의 생성, 성장, 전환을 고민하는 NPO, 시민
- ☐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활동가, 시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연결과 협력 플랫폼

미션

지원자, 대변자, 촉진자

연결, 협력, 전환

지원대상

조직 지원 사업 성과 및 추진 계획

9

조직의 기초 체력 향상 지원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화지원

사회문제해결 지원

조직지원사업 성과_ 393개단체 선정 지원(2014~2019)

2014_ 25개 단체	2015_ 31개 단체	2016_ 40개 단체	2017_ 42개 단체	2018~19_ 175개 단체
1. 조직탄탄성강화(4개) 2. 지속가능보고서발간 지원(4개) 3. 합법프로그램(10개) 4. 합법공구지원(2개) 5. 교육프로그램 지원(10개) 6. 연구지원(2개)	1. 조직역량강화컨설팅(32개) 2. 지속가능보고서발간 지원(4개) 3. 합법프로그램(16개) 4. 합법공구지원(6개) 5. 교육프로그램지원(11개) 6. 연구지원(2개)	1. 조직탄탄성강화(32개) 2. 지속가능보고서발간 지원(13개) 3. 합법공구지원(7개) 4. NPO의 세제지원(8개)	1. 건강안전망지원(16개) 2.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지원(8개) 3. 세분다육교(15개) 4. 작은살림지원(4개) 5. 50+헬로우십지원(12개) 6. 거점공관운영(2개) 7. NPO이슈리제(2개) 8. 합법공구지원(3개)	1. 조직변화실험실(12개) 2. 50+헬로우십지원(16개) 3. NPO상상소(118개) 4. 합법공구지원(19개)

조직진단컨설팅

조직역량강화컨설팅

조직변화지원

비영리스타트업 (조직초기단계 지원, 31개)

조직변화실험실 (2018~)

- 조직 내부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실험과 시도 지원
- 점차적으로 권역NPO지원센터로의 사업 연계
- NPO 공동사무국 사업으로 통합 추진

비영리스타트업(2017~)

- 사회문제해결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 모임(팀) 지원
- 조직 설립의 초기 단계 지원
- 센터 지원 이후 후속지원이 가능한 민간자원 연계

NPO공동사무국(Shared Platform)

- 단체의 사회적 성과 창출 촉진
- 단체가 사회문제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과 관리지원
-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건강한 단체 설립 지원

활동가 지원 사업 성과 및 추진 계획

10

경력별/직무별 교육

미래변화대응 역량강화 지원

활동가의 전문성 향상 및 동기와 욕구에 기반한 학습지원

활동가지원사업 성과_ 2,494명의활동가성장지원(2014~2019)

활동가 장학지원

경희대(23명), 한양대(42명) 장학금 지원 연계

공익활동가 모임

세대와 분야를 넘어선 공동의 가이드라인 제작 (280명)

2014~2015	2016~2017	2018~2019
NPO예비활동가 과정 22명 NPO신입활동가 과정 30명 NPO중간활동가 과정 34명 활동가 경력개발 워크숍 49명	미래변화대응역량강화(활력신군) 7개영역/ 19개 그룹 / 234명 변화대응역량워크숍 3개영역/ 110명	전문성 향상 연구 지원 17개 팀 / 34명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9팀 / 105명
<p>경력별</p> 기획교육 3회/65명 NPO설립및운영이슈교육 연이코의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세계시민사회유망 NPO교육프로그램 참여 23개 프로그램 / 419명	<p>미래변화대응역량강화</p> 민간협력이해 워크숍 135개 단체 / 170명 세대 워크숍 등 특강, 워크숍 250명	<p>활동가 성장지원</p> 조직변화를 위한 특강 10회/ 312명 조직운영을 위한 특강 4회/ 166명 단체투명성지표 활용교육 2회/ 90명

활동가 전문성 향상 지원(2018~)

- 활동가의 활동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
- 전문성에 기반한 전망의 재설계
- 높은 수요에 따른 외부 자원연계를 통한 확장 모색

활동가 역량의 맵(활동가 학습 플랫폼)

- 개별적·분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운영 모델 설계
- 활동가 대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추진
- 스스로의 학습욕구에 맞춰 학습계획을 세우고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역량을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함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 성과 및 추진 계획

11

파트너기관 확대 및 협업

NPO지원을 위한 자원의 연계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지원 생태계 활성화

NPO박람회와 국제컨퍼런스 개최 성과(2014~2019)

2017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 11개 기업(2014년 참여기업)
- 1,000명(2014년 참가자)
- 100개(2014년 후원기업)

NPO x 커뮤니케이션

2018 변화는 어떻게 만드는가?

- 10개(2018년 참여기업)
- 1,000명(2018년 참가자)
- 100개(2018년 후원기업)

NPO x 투자/기부

2019 변화는 어떻게 일수 있는가?

- 10개(2019년 참여기업)
- 1,000명(2019년 참가자)
- 100개(2019년 후원기업)

NPO x 기술

NPO자원박람회(2017~)

- 국제컨퍼런스와 박람회의 통합으로 자원, 정보, 사람의 연계
- 국내외 공익활동 이슈의 공유 및 통찰력(Insight)제공
- 권역센터의 지역자원 박람회 개최 지원

대외협력

- 기존 파트너 관계 공고화와 새로운 파트너기관 발굴
-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금융, 소셜벤처, 공유공간 등의 연계로 지원생태계 확장

권역/자치구 NPO지원체계 구축

- 권역NPO센터 추가 조성을 위한 기초자원조사와 기반 조성
- 권역과 자치구의 협력기반 조성
- 틀뿌리 단체의 지역사회내 역할 강화 지원

시민사회 성장 지원 사업 성과 및 추진 계획

12

공익활동 정보제공

변화사례아카이브를 통한 공익활동 성과 확산

공익활동의 사회적 지지와 인정에 기반한 시민참여 촉진

시정 협력사업 추진 성과(2014~2019)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 시공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제언(2018)
- 시민사회활동성취 기본조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9)
- 권역센터 설치에 관한 기초조사연구(2019)
- NPO입주협업공간 확충 수요조사(2019)

대외협력/민관협력사업

- 동남권NPO지원센터 설립 지원
- NPO의 사회적역무성 강화를 위한 자기진단자료 개발
- 민간지원재단네트워크 협력
- 활동가 이어기주권 협력
- 자리산 포럼 공동개최

포럼 및 공론장 (2019년)

- 단체중심의 시민사회, 무엇으로부터 도전받는가?
- 공익활동의 사회적인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국민참여혁신과제 제안, 민간위탁 제도개선의 방향
- 결합은 직업으로서의 공익활동,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강한시민사회를 위해 마을공동체와 NPO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제도·정책 개선

- 비영리민간단체 집행 지침 개선 (행정안전부)
- 민간위탁제도, 민간보조제도 등의 개선안 마련
- 거부금용법, 지방보조금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 공익활동 관련 법안의 재·개정 노력

NPO참여예산제(2019~)

- NPO 주도의 기획, 실행, 속의, 공론회, 성과 확산
- NPO공동과제, 의제의 정책화 실험 등 2개 분야 지원

시정협력

- 시정 4개년 계획 중 '시민참여분야' 협력
- '현장 연구자 정책 네트워크' 구성으로 다분야 통합 정책 연구 추진
- 협치·공론화가 필요한 정책수립 과정에 NPO와 시민참여 촉진

홍보 및 정보플랫폼

- 정보, 자원, 사람(전문가)의 정보 플랫폼 고도화
- 정책홍보 강화를 통해 NPO정책대응역량 및 시민인지도 제고

공간지원

- NPO와 활동가 지원을 위한 모금·기금 마련 전선 추진
- 방문자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개선

시민사회성장지원 _ 홍보 및 정보 플랫폼, 공간지원

온라인/SNS 활용을 통한 공익활동 정보의 확산

☎ 센터 홈페이지 방문자수	3,185,365명
📄 페이스북 팔로워 수	13,379명
📧 뉴스레터 구독자 수	9,279명
📁 정보 아카이브 게시물 수	2,009건
🎥 타기관 지원사업 등록 게시물 수	666건
📄 블로그 조회수 / 방문자수	344,968건 / 228,181명

공간지원

- 총 대관 회수 5,723회 (대관이용률 80%)
- 총 사용기관수 1,831개 기관(중복제외)
- NPO가 전체의 66.3% 대관
- 총 이용자수 162,844명
- 교육(2,495회), 회의(1,585회) 행사(1,198회)
- 28개 기관 협업공간 입주

홍보및 정보플랫폼

서울시민 공익활동의 베이스캠프

민간위탁의 패러다임 전환



공공기관과 단체의 그 어디쯤?



2) 속기록



▲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저는 서울시NPO지원센터가 NPO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서 발표 드리겠다. 주위에서 NPO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는다. 사실 NGO나 NPO가 지방선거의 표가 되지는 않는다. 뚜렷하게 정치적 소신이 있고, 특별하게 시정에 협력적인 존재도 아닌, 행정이 일할 때 힘들기도 하고 단체 간의 차이도 뚜렷한 조직들이다. 저도 제가 서울시NPO지원센터에 일하면서 서울시에 어떤 성과를 안겼는지 고민을 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NPO지원센터의 목적은 시민사회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센터를 통해 시정에 도움이 되거나, 성남시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일보다, 성남시 시민사회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 성남시 시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민 스스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해가는 것, 그것이 성남시 시민사회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다. 시민사회 활성화의 정의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지지가 만연한 것으로 본다면, 그를 만들어 내는 것이 NPO지원센터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시민사회 활성화에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민사회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주민, 시민의 자발적 결사체가 얼마나 많이 만들

어지고, 활동하는가이다. 시민사회 영역에는 마을운동, 청년운동, 사회적경제 등도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의 근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NPO, NGO인 것 같다. 이런 중요성이 강조 되니 정부에서도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다.

실제 서울시 비영리단체의 활동환경을 자료에 제시하였다. 아마 성남시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열악한 상황일 것이다. 평균적으로 상근자 5명 미만의 단체가 많다. 회원 수는 200명 미만으로, 보통 1만 원씩 회비를 낸다고 하면 대략 회비 수입이 가늠되실 것이다. 그 회비로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비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이야기는 사실 신화에 가깝다고 이야기한다. 연간재정 2억원 이하, 재정자립도는 50% 이하, 대다수 월세임대를 내고 있다. 서울시NPO지원센터의 목적은 이러한 조건에 처해있는 NPO들이 잘 활동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본다.

사실 작은 규모의 단체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애드보커시적 기능을 하는 단체들이라기보다, 아주 작지만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들이다. 이 단체들은 행정에 지원받는 것에 거부감이 적다. 기존 NPO, NGO는 정부감시, 기업감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작은 규모 NPO는 스스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의 지원에 거부감이 적다.

다음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첫 번째로 NPO와 활동가의 성장지원이다. 공익활동에는 여러 영역이 있다. 마을공동체 그룹 안에는 대체로 풀뿌리단체 활동가가 주민을 모으고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다양한 공익활동 영역에서 NPO 활동가가 연결자이자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이들의 성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공공·민간의 NPO 지원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10개 정도의 NPO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런 센터를 만들려는 시도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공공에서 시민사회 지원체계를 만들고 있지만, 공공체계가 하지 못하는 역할이 있다. 예산지원으로 되지 않는, 예를 들어 활동가의 삶에 관한 문제, 안전망에 관한 문제들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의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도 센터의 역할일 수 있다. 세 번째로 시정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도 센터의 역할이다. 협치적 관점에서 시민사회와 관련된 제도나 정책, 공론화 과정에 잘 참여하여 시정과 NPO가 파트너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성장지원 역할이 있다.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시작할 때 현재 NPO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문제정의를 했다. 참여연대나 경실련과 같은 큰 단체들은 시민사회에서 비율이 높지 않다. 대다수의 단체는 운영기반이 약화되어 있거나, 아예 없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상태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도 있다. NPO 사회적 영향력 저하는 그들의 활동 영향력이 떨어진 지점도 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공익활동을 대체하는 많은 시민 모임 생겨나는 점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활동역량과 자존감 저하 문제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을 때는 일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질 때이다. 그러나 NPO는 활동 조건이 좋지 않고, 그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사회가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활동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단체 간의 양극화 문제도 있다. 사회적으로 큰 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으므로 자원이나 행정의 지원이 큰 단체로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NPO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는 ▲조직운영 핵심 역량 강화, ▲사회문제 해결 공익생태계 조성, ▲공익활동가 성장 기반조성, ▲NPO공익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4가지 요소가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게 NPO가 건강한 조직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NPO센터만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시민사회 성장지원 생태계는 아직 안정적이지 않지만 조금씩 싹을 보이고 있다. 민간지원체계, 공적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공익활동에 대한 투자, 사회적가치 투자의 영역도 생기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사이트가 열리고, 직접 펀딩을 통해 활동을 이어 가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시민사회 성장을 지원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까지가 NPO지원센터가 왜 NPO를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에 대한 설명이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전국 단위의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시민’이 모법인으로 수탁받은 센터이다. ‘사단법인 시민’의 주요 리더 그룹들은 기존 시민사회 내에서 활동해왔던 그룹들이다. 서울은 큰 시민사회단체의 기여와 합의를 통해 NPO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나, 이들은 NPO지원센터의 지원 영역에 잘 안 들어오려 한다. 오히려 작은 단체나 새로운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저희가 새롭게 비전을 만들었다.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연결과 협력 플랫폼’을 비전으로, 미션은 공익활동의 지원자이자, 공익활동의 사회적 환경을 알리는 대변자이자,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촉진자이기도 하다. 핵심가치는 연결, 협력, 전환이다. 지원대상은 관심있게 보셨으면 하는데, 조직 생성, 성장, 전환을 고민하는 NPO와 시민이다. 기존 단체뿐 아니라, 단체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 운동

을 통해서 성장한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 때 그것을 지원하거나, 기존의 단체 방식으로 활동하기 싫은 청년들이 그들의 감수성과 기호에 맞게 단체를 만들려고 할 때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NPO지원센터 초기 사업은 조직의 기초체력 향상 지원이었다. NPO의 체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 재정안정 컨설팅을 2-3년 간 진행했다. 그런데 사회가 변화했는데, NPO들이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바빠서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강화 컨설팅을 지원했다. 자료정리나 수집, 플랫폼의 구축 등을 진행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조직의 변화지원이다. 실제 단체 내부에서 끓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현장에 있다. 그래서 올해 3년째 단체가 실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변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조직의 기초 체력 향상과 조직의 지속가능성 변화 지원 두 단계를 넘어서서, 내년부터는 사회문제 해결 지원의 방식을 준비 중이다. NPO와 시민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보려 한다. 그리고 NPO공동사무국 기능을 준비 중이다. 이는 캐나다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역할이다. 단체 활동가들이 행정 지원을 받으면 정산을 해야 하는데, 정산 업무로 인하여 고유의 목적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공동사무국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여 단체 고유의 목적사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으로 활동가 지원사업이다. 초기에는 신입, 중견, 리더 등 연차별로 교육을 진행했다. 그 다음에는 활동가들도 미래 변화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을 지원했다. 활동가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연구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활동가 스스로가 자기 활동이 왜 정체되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정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져야 하는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의 돌파를 위해 작년부터 활동가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경력을 설계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남시에서도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런 프로그램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 내년부터는 활동가의 전문성 향상 및 동기와 욕구에 기반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려 한다. 활동가들이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까, 혹은 오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의 고민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이다. 이것은 센터 역할의 거의 절반일 것이다. 센터가 가진 굉장히 작은 자원만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이루기 어렵다.

서울시NPO센터는 파트너 기관이 256개,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홍보, 마케팅, 회계상담, 데이터관리 등의 업체가 560개 정도 연결되어 있다. 비영리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센터의 역할을 줄어두고, 센터가 없어지더라도 NPO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다. 성남시에 센터가 만들어지면 지역의 관련 자원을 모두 모아보는 과정을 해 보시면 좋겠다.

다음으로 시민사회 성장지원 사업 성과 및 추진계획이다. 서울시는 광역센터와 권역센터가 있어서 역할을 분리할 수 있다. 광역센터는 시민사회 성장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도나 정책 개발, 중앙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이 만들어져야 시민사회 성장지원에 조금 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도나 정책을 바꾸는 것도 센터의 역할일 수 있다. 앞서 김제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통해 원하는 바대로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성남시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 민간위탁은 거의 행정에 준하는 법과 제도를 민간위탁기관이 지켜야 한다. 그것을 넘어보고자 하는 차원의 중간지원조직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중간지원조직은 현장을 만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행정에 덧씌워져 있는 제도와 정책들로부터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서비스의 공동 생산이다. 행정이 공공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을 창의력과 전문성을 가진,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파트너로 인식하셨으면 한다. 그리고 그 파트너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제도나 정책을 만들고,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역할로 보인다.

중간지원조직은 공공기관과 단체 그 어디쯤인 것 같다. 운영은 행정처럼 하고, 사업은 단체처럼 한다. 운영과 사업 간에 괴리가 생긴다. 사업에 대한 독립성이 확보되면 운영의 신뢰나 책임감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다. 민간위탁기관이 조금은 민간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이 민간 신뢰하고, 그 문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남시청의 역할이라 생각하면서 저의 발표 마치겠다.

3 [토론1] 공정옥 대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총괄실장

1) 토론자료

시민참여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

-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개요

- 2016년 4월에 (사)대구시민센터가 대구광역시로부터 수탁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시민공익활동을 위한 회의, 교육, 정보검색 등 인프라 구축 및 공익시설 지원
- 시민공익활동단체 설립, 자원봉사 안내 등 상담지원
- 시민·시민공익활동단체 구성원의 교육실시
- 시민공익활동단체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시민공익활동단체 상호간의 소통증진, 갈등예방·해결
-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 2016년 상근인원 5명(예산 4억)
- 2019년 상근인원 6명(예산 6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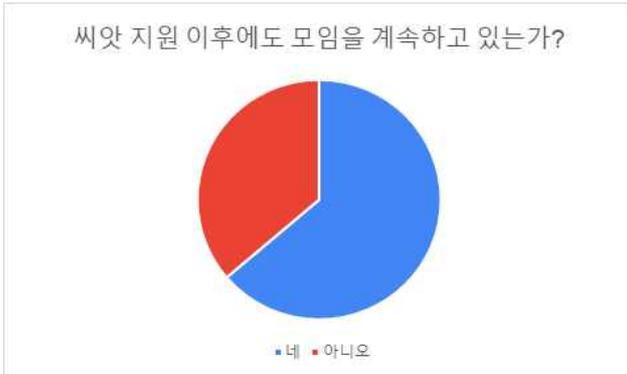
□ 핵심 키워드

시민과 참여	씨앗사업, 열린민주시민교육, 청소년공익활동
도전과 실험	사회혁신실험실, 사회혁신가 인재육성, 소셜임팩트
연결과 성장	역량강화사업, 네트워크거버넌스사업, 공익활동박람회
공감과 공유	공익활동 인식확산, 분홍돌고래(사회혁신도서관)사업, 기초자원조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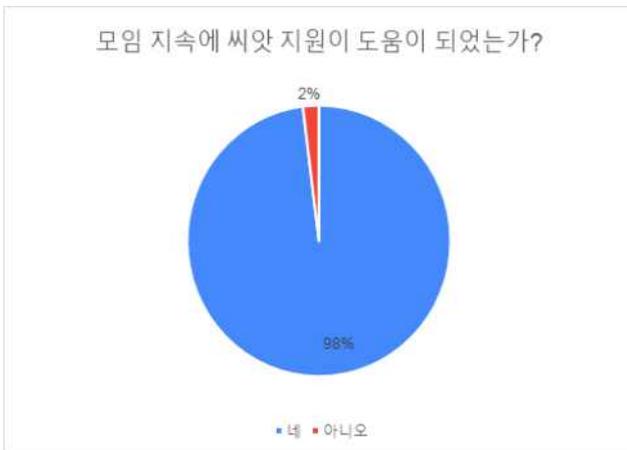
□ 공익활동의 “씨앗”

○ 2016년 28팀, 2017년 40팀, 2018년 60팀, 2019년 99팀 = 총 229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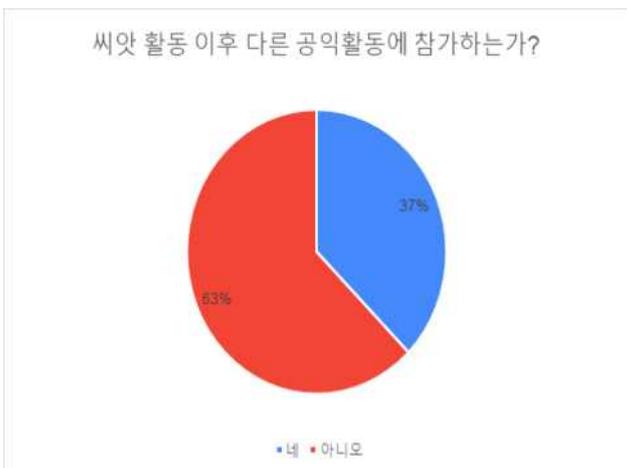
○ 2016년 ~ 2018년 씨앗 모니터링 결과(총 93명의 응답)



네	51(64%)
아니오	29(36%)



네	50(98%)
아니오	1(2%)



NGO, NPO 등 공익단체 행사 참여	13(25%)
씨앗 등 공익센터 다른 공모사업	11(22%)
씨앗 모임 지속	11(22%)
NGO, NPO 등 공익단체 활동	8(16%)
공익센터 이외의 기관(마을센터, 청년센터 등의 공모사업	4(8%)
협동조합, 사단법인, 사회적기업 등 단체 설립	4(8%)

□ 공익활동 의제 발굴과 지원

○ 사회혁신실험실

- 에너지자립시민참여 프로젝트
- 공유공간 실험
- 무장애도시를 위한 플랫폼
-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프로젝트
-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민참여 프로젝트

○ 공익활동단체 역량강화 지원

- 조직컨설팅(비전, 미션 수립 / 조직소통)
- 워킹그룹 구성
- 실무, 리더쉽 교육 / 학습지원 등

2) 속기록



▲ 공정옥 대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총괄실장

오늘은 쟁점토론 형태가 아니라서 대구시 사례를 한두개 들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대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구가 250만 정도이고, 남녀 비율도 비슷하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치적 성향이 매우 보수적인 지역이다. 대구시는 2016년에 공익활동지원센터 만들어졌는데, 2009년도에 사단법인 대구시민센터가 창립되었다. 당시 대구시의 시민운동은 아주 구체적인 이슈로 활동하는 단체가 대부분이었고, 단체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낫설었던 시기였다. 2009년에 사단법인 대구시민센터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중간지원단체라고 보시면 된다. 시민들의 후원회비로 운영을 하고, 공익활동가와 풀뿌리활동가를 지원하는 일을 해왔다. 그렇게 7년 정도 활동을 하고 2016년 4월에 대구시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수탁받으면서 활동을 시도하게 되었다. 자료에 제시한 개요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센터를 수탁받기 전인 2015년부터 준비하면서 그때 먼저 센터가 만들어져 있던 서울, 충북, 천안, 대전을 가보았다. 각 지역에서 어떻게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 조사했던 기억이 난다. 가장 큰 과제는 지역에서 우리 활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였다. 지금이야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대구에서 공익활동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 같다. 각자가 이해하는 '공익활동'에 대한 개념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공공이 하는 일, 선한 일, 자원봉사 이 정도로 공익활동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첫해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했던 일이었다. 그래서 앞에 두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문제를 시민이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활동을 공익활동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회문제'는 무엇인가? '시민'은 어떤 시민인가라는 고민으로 들어가게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전에 '시민'은 시장에서는 소비자, 정부에서는 정책집행 대상자 혹은 민간인, 민원인으로 이야기한다. 저희가 말하는 '시민'은 사회문제를 같이 해결해나가는 구체적인 주체자로 인식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의 공익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자료에 대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대표적 사업인 '씨앗'을 제시하였다. 시민에게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드린다. 50만 원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각자 해결하고자 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초기에는 과연 누가 관심을 가질까, 함께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일상에서 시민이 직접 해결하고 싶은 과제들이 많다는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첫해에는 20팀, 다음엔 40팀, 올해는 100팀을 지원했는데, 점점 시민의 공익활동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제점 중 하나로, 행정은 성과가 무엇이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다. 중학생이 되어서 꿈을 가지게 된 것이 성과로 측정되지 않는 지금 사회에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보여주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3년간 활동했던 씨앗팀들에게 전화로 활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터뷰를 해보았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60% 이상이 모임을 계속하고 있거나,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활동 지원이 꼭 큰 금액을 지원하거나, 거창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시민의 눈높이와 욕구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겠다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시민의 공익활동,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지역의 의제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씨앗’은 대표적인 시민의 공익활동 지원으로 보시면 된다. 기존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규모가 있는 극소수의 단체 외에는 상근자가 1-2명이고 회비도 열악하다 보니 활동가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활동가의 교육이나 역량강화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의제들은 단체가 다루는 의제 외에도 매우 많다. 저희 센터가 이런 의제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혁신실험실’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의제를 발굴한다. 에너지 자립, 공유실험, 무장애도시, 미세먼지 등이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발굴된 의제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가고 있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혁신 의제로도 나오면서 확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공익활동센터가 지역사회 의제발굴에도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시민운동을 오래 해오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 바로 주무관이 세상을 바꾸더라는 것이다. 일을 하다보면 서로 부딪히는 것도 많지만, 실제로 저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1차적인 파트너는 주무관들이다. 성남시도 센터를 준비하는 과정에 민간과 행정이 협력하실 텐데, 함께 준비하셔서 대구보다 좋은 사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4 [토론2] 김현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TF위원

1) 토론자료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TF〉 활동을 중심으로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TF 활동 경험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 지점을 중심으로 토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토론문은 발제문에 대한 토론 내용이라기보다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TF 활동 중 토론 쟁점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TF 간략 경과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TF(이하 TF)는 지난 2월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11차례 회의, 1차례 타지역 센터 견학(충남, 광주광산), 2차례 공청회, 1차례 토론회, 2차례 간담회, 1차례 설문조사(240여명) 등을 개최하고 지난 주 12월 4일, 심화토론회를 마지막으로 공론화 과정을 마쳤음.
- TF 참여자 구성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4명, 전문가(설계자) 1명, 시의원 1명,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되었음.
- 활동의 결과물은 조례안 제안, 센터의 역할, 명칭, 설립형태, 사업방향 등에 대해서 토론하고 내용을 마무리 중임.

■ 토론1 : 센터의 정체성 혹은 역할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 TF 구성원들이 가장 오랜 기간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던 주제는 “센터의 역할 혹은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음. 센터의 역할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음.
- 이를 위해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타 지역의 조례를 검토하여 센터의 정체성을 규정한 내용들을 점검하였음. 대체적으로 각 조례가 정의한 ‘공익활동’은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적 활동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하는 활동이며, 영리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으로 정의내리고 있었음.
- TF 구성원들간 주요하게 갈렸던 쟁점은 1)센터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며 특히 공간을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 2) 개인이든 단체든 공익적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 등 두 가지였음.

- TF가 오랜 논의를 거쳐 정리한 센터의 정체성은 “군포시민 또는 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었음. 이 정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센터는 단체가 아니라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함. 경기도 조례를 비롯해 대부분의 조례도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여 조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
- 그러나 ‘활동’은 결국 사람이 하는 행위이며, 그 활동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은 사람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센터는 기본적으로 공익적 활동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의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이며, 넓은 의미에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지원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 토론2 : 센터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가?(사업의 방향성)

- 센터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중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 말하자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중복된 역할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이었음.
- 만약 센터가 독자적인 공익활동을 전개한다면, 일반 시민사회단체들보다 행·재정적 토대가 우월하기 때문에 기존 공익활동단체들이 해오던 활동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 따라서 센터가 독자적인 공익활동을 실행하기보다는 기존 공익활동이 더 장려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비어 있는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인큐베이팅하는 것, 그리고 행정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네트워크함으로써 공익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이런 원칙하에 센터의 주요 사업방향은 1)공익활동을 위한 정보·교육·공간·자문·장비 등의 지원 2)새로운 공익활동 지원(인큐베이팅) 3)행정·시민사회 자원네트워킹 등으로 제시된 상황임.

■ 토론3 : 센터의 설립 형태는 직영인가, 위탁인가?

- 중간지원조직은 관이 주도하여 설립하느냐, 민간이 주도하여 설립하느냐로 나뉘볼 수 있는데, 군포시에서 추진하는 센터는 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관이 주도하더라도 두 가지 형태, 즉 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과 민에게 맡기는 위탁의 형태가 있음. 이에 대한 토론도 심도 있게 하였음.
- 직영의 경우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부족하고 기관장의 의견이 중시될 수밖에 없으며,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가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음. 운영의 경직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음. 또한 직영이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성과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함으로써 센터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성과위주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지적되었음.

- 위탁의 경우도 관으로부터 독립성이 어느 보장되긴 하지만 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음. 무엇보다 운영 주체의 능력이 센터 전반적인 운영을 좌우하기 때문에 결국 “누가 운영할 것인가”가 핵심이며, 센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비전을 지닌 운영주체의 수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음.
- 이런 장·단점을 놓고 봤을 때, 형태가 어떠하든 관으로부터의 운영 독립성, 운영 주체의 역량, 사업 운영의 유연성, 시민참여 보장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을 때, 직영보다 위탁이 큰 장점을 지닌다고 판단하였음. 특히 다른 지역 센터 관계자들이 대부분 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음.

■ 토론4 :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 조례는 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세세한 내용을 담기보다는 큰 틀의 방향성을 담도록 하였으며, TF 구성원들이 합의한 센터의 정체성(“군포시민 또는 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성격에 맞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음.
- 주요하게 토론되었던 부분은 1)목적 조항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토론 2)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3)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4)공간 사용료에 대해 5)비슷한 중간지원조직, 예컨대 협치 사업, 사회적 경제,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 등의 시 추진 사업과의 협력 등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음.

■ 토론5 : 센터 명칭에 대해

- 센터 명칭에 대해서도 각 위원들이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였음.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화토론회를 통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로 제안하는 것으로 하였음.

2) 속기록



▲ 김현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TF 위원

제가 요청받은 토론내용은, 군포시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했던 고민들을 공유해달라는 것이었다. 군포시는 내년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올해 TF를 구성하여, 활동이 곧 마무리 된다. 제시한 자료를 보시면 TF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4명, 전문가 1명, 시의원 1명,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가 핵심이었다. 이것을 처음부터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토론했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시민사회단체는 공간지원을 요구했다. 입주공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단체에 대한 지원요청도 있었다. 다른 하나는 경기도 조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조례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닌,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다. 한 명이든, 열 명이든, 조직이든, 단체든 거기서 하는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한 결과, “군포시민 또는 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정체성을 정리하였다. 이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6, 7개월의 많은 토론회, 공청회 등 긴 과정이 있었다.

두 번째는 사업의 방향성이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크게 보면 민과 행정의 중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나 행정이 하는 일을 중복하지 말자, 독자사업 하지 말자는 것이 시민사회 활동가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었다. 왜냐하면 센터는 토대가 탄탄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잠식할 수밖에 없고, 시민사회의 영향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걸 피해서 철저히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사업을 잡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수렴을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말이 너무 어렵다는 의견을 주었다. 플랫폼이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돌아가는 분들이 태반이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큐베이팅'이라는 말도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다는 말로 표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센터의 설립 형태이다. 여기에는 직영과 위탁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은 김제선 소장님이 말씀해주셨다. 저희는 결과적으로 위탁으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민간진영의 자율성, 독립성, 참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운영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하다. 어떤 형태이든 그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할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기로 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한 부분이다. 내용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사회적가치에 대한 조례가 없다. 그래서 사회적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군포시에도 비슷한 중간지원조직이 많다. 도시재생, 협치사업,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주민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다. 시민참여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중복해서 센터를 만드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이런 중복되는 일을 통합하고 모아서 제대로 공익활동을 지원하자라고 조례 안에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센터명칭이다. 시민들은 NGO, NPO, 공익활동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말씀드렸던 것은 명칭에 그 누구도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이 만든다면 기존 용어와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세 가지 근거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로 제안하였다. 군포시는 이와 같은 고민으로 논의해왔다는 점을 공유 드린다.

5 [토론3] 박재윤 호모인테르 대표

1) 속기록



▲ 박재윤 호모인테르 대표

저는 생생한 수혜자의 목소리를 들려 드릴 수 있을 거 같다. 여기 계신 많은 분이 중간 지원조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과연 시민사회에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자리인 것 같다. 저희 호모인테르는 실제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활력향연’ 1기로 시작했다. 두 명으로 구성된 단체인데, 둘 다 다문화를 전공해서 난민 이주민의 통역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을 해보자고 시작하게 되었다. 저희는 사실 활동을 하려고 만들어진 팀인데, ‘활력향연’을 통해 활동이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확장해준 프로그램이었다. 운이 좋게 선정이 되고, 1년간 참여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활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3기에도 선정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

호모인테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소통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그전에는 열정으로, 뜨겁게 현장에 부딪히며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지,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하는 게 뭔지, 공익활동인지 아닌지 잘 몰랐다. 그저 내 활동

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말 정교하게 지원해주었다.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겠다.

비영리스타트업 사업은 코칭멘토링,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확장, 재정지원으로 이뤄져 있다. 저희가 도움이 된 지점은 코칭 멘토링이다. 여기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게 무엇인지 적절한 질문을 던져주었다. 단체로서는 활동에 매몰될 수 있는데 거기서 빠져 나와 제3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 지점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비영리스타트업은 조직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서울시NPO지원센터가 공동사무국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매우 기대된다. 활동과정에서 행정적인 면이 활동보다 커서 힘든 지점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이런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교육을 통해 지원한 점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또 하나는 네트워크 확장이다. 비영리스타트업 3기에도 여섯팀이 있다. 이 단체들끼리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또 하나의 그룹이 형성되고,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점이 발견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아쉬웠던 지점은 인건비가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 활동지원금에 인건비 책정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속가능성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정말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가는 고민을 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할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중 의미가 컸던 것은 바로 사회적인 지지였다. 저희가 사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활동을 했겠지만, 사회적으로 우리의 활동이 가치가 있다는 지지가 많은 힘이 되었다. 앞서 김제선 소장님이 문제와 결핍이 아닌 자원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점에서 많은 공감을 한다. 저희 활동이 난민 이주민과 함께하는데, 이들이 약자이고, 사회문제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난민이 사회의 또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팀이다. 아마 호모인테르가 난민들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이 시민사회에 있는 단체들을 매니징해서 어떻게 잘 키울까라는 생각보다,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함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6 [토론4] 이준호 성남KYC 공동대표

1) 속기록



▲ 이준호 성남KYC 공동대표

성남연대에서 11월에 두 차례 걸쳐서 관련 토론을 진행하면서, 오늘 발제와 토론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공동사무국 얘기하셨는데, 선배가 공동사무국을 고민하셨는데, 끝내는 잘되지 않았다. 이것을 민의 힘으로만 하려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정의 지원을 거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많이 든다. 성남연대에서 두 차례 토론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가 시민사회 활동이 기존 이슈 파이팅에서 사회문제 해결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자기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KYC 경우 활동가들이 자기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타민기금'이 있다. 작게는 몇십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그런 마중물이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이로운재단이 이런 활동을 고민해주고 계시다.

성남시의 시민사회지원센터가 이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기존 활동하는 조직, 다양한 시민,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를 지원하고, 이 안에서 뭔가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슈파이팅을 하는 시민이 많아졌다. SNS 활동으로 여론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시민참여 구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이 파편화되어있기도 하다. 파편화된 개인이 공동체화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지난 지방정부에서도 NPO지원센터를 구상하다가 만들지 못했다. 그때는 공간을 중심으로 생

각했는데, 이젠 공간이 아닌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노동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계속 무임금으로 노동해야 하는가? 시민노동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인정하고 지불할까라는 고민이 있다. 활동가들이 사회적기업, 시민사회 활동가, 소셜디자이너, 마을활동가 등 가치 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과 강사가 많이 발굴되고 있다. 이들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사회적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분들에 대한 노동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그리고 그 활동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 유럽에서는 문화활동가들이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활동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준비해온 것을 단순히 1시간 공연에 20-30만 원 책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우리 시민사회도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몇몇 분들은 기본수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지만, 활동에 대한 증명이 계속 고민이 된다.

지불방식은 이탈리아의 카디아이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카디아이는 행정과 민이 같이 활동하면서 공공영역에 필요한 프로그램 만들고, 공공에서 믿음을 갖고 지불해주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행정이 민에 대해 신뢰를 갖고 끊임없이 구매해주는 방식이 괜찮겠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방식은 시민에게 공익활동을 증명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토론회, 성과보고회와 같이 공유됨으로써 검증, 인증받고 지불이 만들어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최근 제가 환경 관련 에너지자립계획 연구보고 한 것을 보면서 화가 났다. 불과 몇 년 전 연구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인구를 118만으로 전제하고 연구했다. 아직 100만이 안 되는데, 인구수를 20% 상향 책정했고, 서울공항이 없어진다는 식의 말이 안 되는 전제 보면서, 지역을 알지 못하는 기관의 연구가 보고서로만 남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과정에 지역사회 일꾼이 참여함으로써, 그들 활동에 대한 성과도 보장하고, 활동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센터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내면 좋겠다.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이 지역에서 인정받고, 활동의 성과가 우리 사회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최근 우리 시가 여러 지원센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종 결정 단계에서 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실질적인 협치가 되려면 조금 더 신뢰회복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논의는 같이했는데 결국 결정은 관이 하면서, 민은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 민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면 짱이다. 시민노동과 관련한 것들이 플랫폼에 녹아나고, 민과 관이 함께 신뢰를 만들어나가는 선례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1) 속기록



▲ 심우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시민단체는 행정이 세금으로 하는 일, 민간기업이 자본으로 하는 일과 다른, 사회적자본을 만드는 단위라고 생각한다. 정부나 기업이 못 하는 것을 부담하고, 만들어 내고, 헌신하는 게 시민단체다. 이런 점에서 시민단체가 어려움이 처해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성남시의 단체들도 상근자가 없거나, 반상근자, 열악한 사무실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관계자들이 모인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은 실무를 할 때 관련 법에 맞춰야 하고, 공직에 있기 때문에 경직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이에 비해 자유롭다. 이런 차이의 완충, 조정의 역할이 분명 필요하다. 그리고 성남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는 과거 학생운동 등의 경로로 시작되었는데, 현재 새로운 약자들, 청년, 학생 등 10대도 시민운동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성남에 없다. 이런 기반을 누가 만들 것이냐. 저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새로운 형태, 새로운 세대, 기존의 영역이 아닌 것들을 시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기존의 시민단체도, 행정도 못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다고 본다.

활동가 인건비는 관에서 보장이 되지 않고, 공직에 있는 분들과의 형평성 등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관에 호소해서는 쉽지 않다고 본다. 타지역에 중간지원조직이 재정사업을 해서 기금모금과 배분을 한 사례가 있는지, 기업 등을 통해 받아 모금을 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8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현재로서 중간지원조직은 예산 이외 수익을 통장에 받을 수 없다. 중간지원조직에 내려지는 예산 자체가 시의 보조금 중 하나이고, 민간보조의 여러 사업 중 하나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금 외에는 외부 수입 받을 수 없다. 다만, 중간지원조직의 통장에 바로 받는 것이 아닌, 중개해서 배분하는 것은 시의 정산문제와 상관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다수 중간지원조직은 수탁법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수탁법인은 대체로 단체들이 한다. 외부로부터 받는 기금은 수탁법인이 받아서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조직 센터를 통해서 배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사례는 한국타이어 기업이 올해 발굴한 비영리스타트업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 모법인을 통해 지원한 사례가 있다.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시민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 해야 할 내용이다. 다만, 공익활동에 대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지원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혁신인턴제도를 통해 생활임금 수준의 뉴딜일 자리를 통해 10개월 정도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단체는 이 지원을 받아서, 이런 활동을 한 사람을 단체에 정식 채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서울 뿐 아니라, 대전, 대구 등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 예산 편성을 자치단체가 하지만, 운영은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해서 배분, 관리, 훈련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이다. 이것은 원래 목표한 사회적 성과를 초과 달성하면, 공적예산 투입을 감소시켜준 만큼 지방정부에 보상금으로 주는 제도이다. 이것은 성과금이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다. 성남시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정성적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서 보상할 것인가이다. 이 문제가 쉽지 않은데, 명료하게 예를 들면 소녀소년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한다는 계약에서, 몇 개를 배달했는지는 금방 측정되지만, 정성적 성과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합의를 해야 한다. 직접적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인력파견이나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드린다.

[윤석인 前]성남시 음부즈만]

중간지원조직 개념이 들어온 초기에는 개념 정리가 잘되지 않아서 혼란이 있었다. 3년 이후에 자립하라는 말도 있어서 난리 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일본은 고베 대지진 이후, NPO가 큰 성과를 낸다는 것이 입증되어서 지방 정부가 기금으로 NPO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NPO는 거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일부가 위탁운영이 되고 있다. 홍콩은 거의 개인이 지원하고, 미국은 카네기재단, 록펠러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저는 이런 다양한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동원 성남시약사회 회장]

공익활동이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자치 운동이라 말씀하셨다. 현재 국가적으로 엄청난 폐의약품이 폐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이 모범적으로 먼저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활동을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리고 폐의약품이 일으키는 오염문제가 심각해서, 성남시약사회는 지난 7년간 사무국 지원금으로 시민이 가져온 폐의약품을 거의 100% 수거해왔다. 성남시 조례에 보면 이런 활동을 시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아직 약사회는 이런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서, 성남시의료원이 성분명 처방을 통해 절약된 의료비를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약품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문성 미흡하다. 말씀하신 문제의식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과 제도 내에서 성남의료원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성남시약사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폐의약품을 줄이고, 환경적 가치를 지킬뿐더러, 그 성과를 다른 계층과 나누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실천할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성남시에 부탁드리는 것은 먼저 조례를 잘 만드셔야 한다. 공익활동, NGO지원이라고 할 때, 분명하게 어느 범위까지 지원하는지 잘 만들면 좋겠다. 예를 들면 외부 자원을 끌어와서 모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조례에 그 내용이 없으면 너무 어렵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셔서 잘 만들면 좋겠다. 두 번째는 조례 제정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간뿐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에 역점을 둘 내용이 무엇인지 시민사회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좋은 일은 많이 하고 싶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남지역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다음으로 일반 시민을 포함해서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지 욕구 조사가 데이터로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근자 지원 필요한지, 사무실 월세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지, 인력 역량개발이 필요한지에 필요한 지원에 따라 사업비가 편성되도록 하고, 그것으로부터 그다음 단계로 발전하도록 강구해야 한다. 공직자에게 왜 안 해주느냐 채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조사해보니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 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의회에 협력 구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

예산 사업비 편성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의회가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무과정에 들어가면 여러 협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행정의 시각과 시민사회의 시각에 합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행정은 우리 사무를 대신하는 준공무원집단으로 보고, 시민사회는 운동성이 떨어진 직업군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중간지원조직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변화의 운동성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성남의 선배활동가, 기존 단체들이 많은 협력지점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다만 현재 상태에 대한 해결보다는 미래 전망과 비전을 갖고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중간지원조직이 시민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나중에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초반 센터를 만들 때, 기존 성남시 시민사회단체와 행정이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큰 틀에서 비전과 미션을 마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